오픈 프라이머리 의총?… 새정치 긴장고조

서명파 내일 소집 요구…文측 "혁신안과 배치돼 부적절"

지도부 "교과서 집중할 때"…공직자평가위 출범도 설전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 채택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 오픈 프라이머리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오는 27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는 교과서 정국에서의 내부 분열 등을 명분으로 의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서명파 측에서는 전체 지역구 의원의 80%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한 사안을 지도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7일 의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전남 중진 의원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의원이 의총을 요구한 것은 당이 뒤집힐 정도의 큰 일이지만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의원 1/3이 요구하면 의총을 소집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서명파 측에서는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후 의총을 열어 박 대통령 연설에 대한 후속 대응책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는 "혁신안에 배치되는 안건을 위해 의총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자칫 잘못될 경우, 교과서 정국에서의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5대 범죄 전력자 이외에 모든 당원들의 출마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현역의원 평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을 열어서도 안되며, 열더라도 문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원내지도부 역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 측은 "실무진에서 27일 의총을 여는 방안과 연기하는 방안 등 2가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교과서 문제까지 얽힌 만큼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 원내대표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조은 위원장이 이달 내에 평가위 구성을 완료하고 물갈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은 더 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에서는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현역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평가 제도와 상충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 논의는 이제 더 거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명을 주도한 최규성 의원을 중심으로는 당론화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가위 출범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총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에 평가위를 출범시켜도 늦지 않고, 당내 통합을 위해서도 올바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 진영에서 평가위를 조기에 출범시켜 비주류 진영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가 출범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주류 진영 의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이를 토대로 총선까지 당을 확고하게 장악, 신당으로의 이탈 세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입법화되면 평가위의 평가 작업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 평가위 조기 출범을 통해 당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사교과서 살피는 文·沈·千 '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1가 보신각 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 개막식에서 전시중인 한국사 교과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싱크탱크 내일 '저성장 해법' 공동 세미나

여 '4대개혁'·야 '정권교체' 논리 정면충돌

여야 싱크탱크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여당의 '4대개혁'과 야당의 '정권교체' 논리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25일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인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는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정책기조의 재확립'을 주제로, 금융·교육·공공·노동개혁 등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효율성 저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분석, 저성과자에 대한 감봉이나 업무방해자에 대한 해고의 자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모든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완화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해법 혹은 정치적 해법'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해선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권교체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 부원장은 발제문에서 "결국 정치의 변화 없이는 경제적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며 "총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이 대선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부원장은 "경제야말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변수"라며 석유파동에 이은 신군부의 쿠데타,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의 집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 세미나를 계기로 총선을 앞둔 정책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3차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park@

10·28 재보선

金 "연승가도 사수" vs 文 "연패사슬 차단"

여야 대표 전국 돌며 지원 유세

사전 투표율 3.58%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28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소리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되지 않아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경남 고성군수와 서울 영등포 시의원, 신안군의원 등 전국에 24명의 기초단체·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지역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 고루 퍼져 있어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비록 소규모지만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당할 수 있어 적잖이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일 전국에 다니며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에도 부산 사상구(기초의원), 부산 진구(광역의원)를 찾아 지원유세를 벌였다. 앞서 21일에는 경남 고성, 22일 인천을 연이어 방문해 거리 유세를 펼치고,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올해 4·29, 지난해 7·30 재보선 압승을 거둔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만큼 국정화 반대 여론을 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보선 연패 고리를 끊을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고성군수의 경우 여권 후보 난립에 따른 예상 밖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은 문 대표도 지난 11일 고성에서 백두현 후보와 시장을 돌며 시민에게 지지를 당부했고, 지난 8월에도 일찌감치 백 후보의 사무실을 찾아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 많고 투표율이 낮아서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실시된 재보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58%를 기록했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선거인 106만7487명 중 3만8224명(3.58%)이 참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6.74%보다 3.16%P 낮은 수치다.

선거구별로 보면 신안이 16.03%를 기록, 기초자치단체장(1곳)·광역의원(9곳)·기초의원(13곳) 등 전국 23곳 선거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함평(12.50%)·목포(9.96%) 등이다. 가장 낮은 선거구는 경기도 의정부(의정부시제3)로 1.65%를 기록했다. 선거별 사전 투표율은 기초단체장 7.85%, 광역의원 2.49%, 기초의원 4.79% 등이다.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한 뒤 선거일인 오는 28일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소로 옮겨진다. 오는 28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정치 김동철 의원 국토위원장 내정

4년 임기중 위원장 두번 첫 사례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산갑)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탈당한데 이어 지난 5일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후임 국토위원장을 논의한 결과, 김동철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하반기 임기 2년의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에 선임됐지만 1년만 활동하고 같은 당 노영민 의원에게 나머지 1년을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의 국토위원장 선임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 중에 두 번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김 의원은 2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지역현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6년도 전남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파트너)훈련센터 모집 공고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15년 전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적합한 역량있는 공동(파트너)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교육훈련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일반사항
가. 공 고 명 : 2016년도 전남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파트너)훈련센터 모집
나. 접수기간 : 2015. 10. 20(화) ~ 11. 13(금) (매일 09:00~18:00, 토, 일 접수불가)
다. 접수장소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B/D 6층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참여자격
가. 공동훈련센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추천서 제출
나. 파트너훈련센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참여 분야

구 분	훈련계획서 제출	지 원 내 용
공동훈련센터	독립적 제출 (파트너 계획 포함)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용
파트너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에 포함 제출	훈련비용

※ 훈련비용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4. 제출 서류
가. 공동훈련센터 신청서 및 공문 1부(훈련계획서 15부)
나.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서 파일(USB 저장장치) 1식(기관명 표기)
다. 직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1부(해당기관에 한함)
5. 설명회
가. 일 시 : 2015년 10월 28일(수) 14:00 ~ 16:00
나. 장 소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실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B/D 6층
※ 문의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이시범(☎ 061-273-0990)